

근현대 ‘동아시아’ 질서의 퍼즐 맞추기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를 읽고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I. 지금-여기에서 지역을 묻다: 이 책이 놓여있는 자리

지정학적으로 중화(中華)질서/동아시아지역은 중국 중심의 문명권이자 한자 문명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중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여기에 러시아가 대륙세력에, 미국과 유럽 열강이 해양세력에 합류해 들어왔다. 그래서 근현대 한반도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열강들이 접하고 있는—세계적으로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움—지정학적 공간에 놓이게 된다. 일찍이 황준헌이 『조선책략』(1880)에서 “조선이라는 땅은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기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파한 것은 한반도의 이러한 독특한 지정학적 위상을 지적한 유명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한편, 이러한 지정학적인 ‘구조’적 요인은 중화질서/동아시아지역에 이른바 ‘전환기’적 상황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가곤 했다. 예컨대 16세기 말 일본의 전국(戰國)시대가 마무리되어가던 격변기적 시점에서 한반도는 두 차례의 왜란—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치러야 했고,

¹ 황준헌, 조일문 역주, 『朝鮮策略』(건국대학교출판부, 1977), 10쪽.

17세기 중엽 중화질서의 패권이 한족(漢族)에서 만주족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른바 ‘명청교체’의 시점에서 두 차례의 호란—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휘말려 들었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 청에서는 조선 속국화(屬國化) 작업이 추진되며 조선을 경쟁적으로 압박해 왔는가 하면, 얼마 후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연달아 발발하면서 급기야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점(強占)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국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그것은 반쪽으로 쪼개진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 등을 기점으로 ‘냉전’의 기운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의 국제전(國際戰)을 치러야 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아울러 냉전이 해체되고 21세기가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위기의 초점으로 ‘북핵문제’가 떠오른 것이나, ‘전쟁위기설’의 회오리가 우리 주변을 불안하게 배회하는 작금의 상황 역시 한반도의 장기적 역사의 맥락 위에서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위상과 전환기의 ‘역사적’ 경험은 한반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며 또한 취약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한반도가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 그리고 ‘여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정책결정자, 지식인, 시민사회들이 국제정치 및 세계질서 혹은 동아시아지역 질서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정치와 세계질서에 관한 논의가 한국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입체적이고 섬세하게 축적되어있으며 체감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질서에 관해 한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심도 있게 사고(思考)하는 것일까.

평자의 관견(管見)으로는 장인성 교수의 저서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는 단순화시켜 말하면, ‘근현대 한국인에게 동아

시아지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저자 나름의 답변이다. 저자는 근현대 동아시아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위주체—제국, 국가, 혹은 사회들—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로 구성된 지역 질서의 현실과 주요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전환기의 정치사상사적 맥락에서 포착하려 한다. 본서의 제목에 '동아시아'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책은 동아시아지역을 구성하는 현실과 논리, 담론과 아이디어 등의 역사와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퍼즐을 조망하며 맞춰보려는 저자의 집요한 열정(熱情)과 지난한 학문적 여정(旅程)의 결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근현대 한국의 국제정치사상'의 구체적인 실상을 입체적으로 밝혀내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저자는 부제(副題)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책은 '지금-여기'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현실과 의미를 어떻게 묻고 어떻게 재구성해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

II. 본서의 구성과 이 책이 다루는 핵심내용

저자에 의하면 중화질서/동아시아지역은 19세기 이래로 중화제국에서 서양 제국주의/근대 국제질서와의 조우를 거쳐 일본제국, 그리고 전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기의 글로벌 제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20세기 말 탈냉전질서로 들어서면서 국제화·지구화의 대세 위에서 그동안 제국의 주도 하에 적극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주권국가 체제가 소생하고 서로 활발히 경합하게 되면서 비로소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재발견되고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게 된다. 요컨대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탈냉전, 지구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19세기 이후로 중화/동아시아지역에서 중화제국에서 일본제국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하게 되거나, 냉전의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글로벌한 제국의 주도 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내'에서 국제관계나 국제사회를 상정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는 반면, 반대로 제국의 규정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개별국가들의 대외적인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사회로서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저자는 근현대 동아시아지역 질서를 ‘제국이 주도하는 시대’ vs. ‘주권국가가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사회’가 서로 경합하고 교차하는 과정으로 해석해 들어간다. 그리고 ‘동양’,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둘러싼 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시공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19세기 말은 개항과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화제국체제가 무너지고 한자문명권에 주권국가 체제가 성립했던 반면, 20세기 말은 탈냉전, 지구화의 흐름 위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주권국가 체제가 새롭게 작동하게 된다. 전자인 19세기의 경우 주권국가 체제가 새롭게 작동하였으나 동양 삼국 사이에 적응력과 국력의 현저한 차이로 주권국가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후자인 20세기 말의 경우는 글로벌한 냉전제국의 규정력이 약해지면서 지역 국가들의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협력하고 갈등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국제사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서가 ‘동아시아 국제사회’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질서의 공통된 이해와 가치 그리고 세계관, 공유하고 있는 문자(文字)와 역사적 경험의 토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동아시아지역 질서의 공통분모라고 부를 만한 영역에 관한 깊은 이해와 천착이 진행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지역의 ‘근대 이후’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지금-여기’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현실과 의미를 묻기 위해, 지역 질서가 갖는 특수성과 역사성을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모범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를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유럽 국제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유럽의 고유하고 독특한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영국학파의 문제의식에서 ‘근현대 동아시아지역 질서’의 심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본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라는 문제의식 혹은 시야를 서술하는 제1부,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지역 질서의 핵심주제와 개념들을 천착하는 제2부, ‘탈냉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논쟁적인 현재적 이

슈들을 조명하는 제3부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제1부의 내용이 저작의 방법론적인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의 본문은 사실상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제2부로서 19세기 후반 기존의 고유한 중화질서가 서양 제국주의에 밀려 크게 동요하다 결국에는 해체되고 이 과정에서 '주권'국가와 '국제'질서라는 외래의 이질적이면서 새로운 근대적 기준들과 핵심개념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른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곧 탈중화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 시기는 '천하(天下)'라는 기존의 개념을 대신하여 주권/자주독립 국가, 내셔널리즘, 국제질서, 지역질서 구상의 정치적 언어들이 새로이 들어왔던 시대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와 개념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는 전환의 시기였다. 그런 만큼 20세기 한자(漢字) 문명권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게 될 생소한 개념들이 경쟁적으로 번역 유입되던 '혼돈'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의 제3부로서 21세기 전환기적 상황의 동아시아지역을 다루는 내용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냉전체제가 20세기 말에 붕괴되면서 기존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형 혹은 무형의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협력의 구상과 함께 과거와는 달라진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은 정보혁명의 시대와 본격적인 세계화의 흐름 위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3부는 동아시아/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협력의 구상과 담론들을 분석한다.

한편 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테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제2부는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나열하면, 요컨대, 아시아, 동양, 중화(中華)와 동번(東藩)과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와 용어가 도입되어 사용되는 맥락을 다루는 제4장,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주권과 만국공법(萬國公法)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다루는 제5장, 세력균형/균세(均勢)/정립(鼎立) 개념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의미에 나타나는 연속과 불연속을 다루는 제6장, '동양평화'담론의 시대적 맥락을 다루는 제7장, 일본의 동양연대론에 내포된 인종주의와 지역주의를 다룬 제8장, 시대적 흐름에 따른 근대일본의 '질서'와 '정의'개념의 변용을 추적하는 제9장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제3부는 탈냉전, 지구화, 정보화시대에 나타나는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문제를 다루는 제10장, ‘아시아적 가치’와 일본의 동아시아론을 분석하는 제11장, 현대 한국 지식인에게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을 다룬 제12장, 탈냉전기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협력의 심리구조를 분석하는 제13장, 동아시아지역의 문화교류를 다룬 제14장으로 역시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I. 본서의 매력과 가치

한국 국제정치학의 흐름은 그동안 미국 국제정치학을 모범으로 그들의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하여 지금-여기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구미의 세계정치 경험이 반영된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세계정치와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보여주었지만 이른바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구미의 세계정치, 국제관계의 논리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던 만큼 전혀 다른 역사적·문명적 배경 위에 성립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해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20세기의 한국 국제정치학의 주류는 글로벌한 냉전제국들에 관한 내러티브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아시아지역에 관한 논의는 세계사적인 구도나 한반도와 관련된 성숙성 속에서 협소하게 조명되어왔을 뿐이다. ‘동아시아지역’이란 대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서만 취급되거나 아예 공백으로 존재했고, 지역에 관한 논의는 미시적인 사건들과 에피소드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서세동점에 따라 한자문명권에서 이른바 ‘문명기준’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후, 이 지역에서 줄곧 이어진 서구/근대 따라잡기 경향과 함께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즉 선진 vs. 후진, 우등 vs. 열등, 발전 vs. 정체, ‘보는 쪽=대표하는 쪽=보호하는 쪽’ vs. ‘보이는 쪽=대표성이 결핍된 쪽=보호받는 쪽’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태도와 뿌리 깊게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평자가 앞에서 본서의 내용과 주제를 저렇게 번잡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국 근대 국제정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을 거의 망라하여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권과 독립의 문제, 무정부적인 근대 국제질서와 안보문제, 세력균형과 동맹, 전쟁과 평화의 문제, 국제법, 문명과 진보, 정체성의 정치와 연대의 전략, 질서와 정의 등과 같은 국제정치의 방대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근대 동아시아지역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지식인의 사유와 실천의 공간에서 어떻게 수용, 전파 혹은 변용되었는지 망원경과 현미경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정밀하게 논의하며 재구성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국제정치학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정치적 담론(텍스트)들의 맥락(컨텍스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중화질서/동아시아지역이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권과 같은 새로운 현상과 접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에 의해 근대 동아시아 질서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국제정치학이나 사회과학 교과서, 법학 관련 교재들은 이른바 ‘국가의 3요소’를 주권, 국민,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공법학자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의 견해를 따온 것으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적하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자칫 매우 중요한 오해와 사각(死角)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러한 이해방식은 주권, 국민, 영토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주권국가가 인류의 역사에서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초역사적인 실체라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칭하는 ‘주권(Sovereignty)’이란 용어는 16세기 후반 유럽의 역사에서 생겨난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서, 한자문명권/동아시아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에 주권개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중화질서 내부의 국가 간의 관계가 ‘국제(國際)’관계로서 새로이 재구성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국가의 3요소에 관한 엘리네크의 설명은 오늘날의 국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구조적 설명’은 될 수 있지만, 한자 문명권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동아시아 근대사’나 ‘한반도의 근대 국제정치사’의 주요한 현장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자가 여기에서 본서의 매력과 가치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하니,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 아날학파의 거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의 비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브로델은 역사를 세 개의 층위(層位)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바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세 개의 층위를 설명하곤 했는데, 출렁거리는 바다의 ‘표면(表面)’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들의 세계이며, 바다의 밑바닥에 해당하는 ‘심연(深淵)’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세계로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바다의 중간에는 해류(海流)가 가끔씩 방향을 바꿔 흐르면서 완만한 리듬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브로델은 이를 ‘완만하고 유장한 리듬을 가진 역사’에 비유했다. 브로델은 역사를 아래쪽에서부터 각각 ‘구조(structure)-콩종크튀르(국면전환, conjuncture)-사건(event)의 역사’라고 명명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브로델이 지적하는 것처럼, 콩종크튀르 곧 국면전환—사상사적인 차원에서는 ‘시대정신의 변화’와 전환기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시적인 사건들의 역사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사건들의 의미는 매우 협소하게 파악되기 쉬우며, 반면 구조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역사에서 움직임을 제거해 버리는 오류에 빠질 소지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브로델의 표현을 빌리면, 전자의 경우는 “역사를 멸시하고 스스로를 단기적인 사실에 국한시켜 실생활의 조사에 치중하는 경험적 사회학에 힘입어 사회과학적 연구를 지나치게 ‘사건화’하고 ‘시사화(時事化)’하는 것”이며, 반대로 후자의 태도는 “거의 비(非)시간적인 구조에 대해 수학적 공식을 상상함으로써 전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본서의 매력과 가치를 거론하면서 브로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책이 지역질

² Fernand Braudel, *On History*, tr. Sarah Matthews (Univ. of Chicago Press, 1980), 35쪽.

서에 대해 사건사 위주로 편협하게 접근하거나 혹은 역사에서 움직임을 제거해 버리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다가가는 오류를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브로델 만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경우를 평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의 종장에서 국제정치학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적실성을 견지할 수 있으려면 “이론에서 역사로” 관점을 바꿔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도 평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동아시아지역 질서의 퍼즐을 맞추려면 서양의 이론으로 중화질서/동아시아지역의 역사를 재단하고 포퓰(褒貶)하는 일방적인 시선을 지양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론과 역사를 일종의 씨줄과 날줄로 삼아 동아시아지역의 균형 있고 생동감 있는 전체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IV. 본서가 지금-여기에 던지는 과제

본서는 그 분량만을 보더라도,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고 3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로는 대략 590여 쪽에 달한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9세기 이후 21세기까지 ‘근대와 탈냉전 시기’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아시아/동양/동아시아/동북아를 둘러싼 주요한 담론들을 천착해 들어간 대작이다. 평자는 구조와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총횡무진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말과 개념의 쟁투가 벌어지는 시대적인 맥락들이 해명되는 놀라움과 함께 내용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압도당하는 경험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는 특별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본서는 근대 한국국제정치사상을 동아시아지역 질서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 가치 최초의 저작으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곁에 두고 참고할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는 각각의 주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논할 만한 능력과 여유를 평자는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남은 지면에서는 이 책과 관련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두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본서는 한·중·일 삼국에서 동도서기(東道西器), 중체서용(中體西用), 화혼양재

(和魂洋才)와 같은 절충적 사고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평자로서는 유사한 사유만큼이나 그것의 차이점에 주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래야 19세기라는 위기상황에서 서로 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른 대응을 하는 각국의 인식과 실천의 모습들이 포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언급하면, 동도서기론은 중국의 중체서용이나 일본의 화혼양재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방식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방식은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체서용이나 화혼양재의 사유방식은 각각 ‘중체(中體)’ 및 ‘화혼(和魂)’이라는 독자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중화문명 vs. 서양’ 혹은 ‘대화혼(大和魂=일본정신) vs.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관계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독자적 주체로서 인식하기 쉬운 반면, 동도서기론은 조선이라는 일국적 범위를 넘어선 동양과 서양이라는 대비 위에서 사유방식이 구성되고 있어 조선의 근대국가로서의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상적 딜레마를 내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동도(東道)는 중화문명 혹은 동양문명으로 등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화제국에 대해 친화적인 감정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편승하려는 의식으로 이어지기 쉬웠으며, 중화제국이 해체한 이후에는 동아연대론 혹은 아시아주의로 휩쓸리기 쉬운 사상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문명개화론자들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을 새로운 문명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동도서기론의 심층에 놓여있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항대립적 사유방식은 자기비하와 열등감에 빠져드는 지식인들을 일종의 서도서기(西道西器) 곧 문명개화론으로 전향하기 쉽게 만드는 인식론적 매개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여기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 앞에 직면하고 있다. 어쩌면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과 닮은 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미래가 20세기 전반의 불행했던 유럽의 전철을 되밟을 것인지, 아니면 20세기 후반의 유럽처럼 협력의 동반자의 길을 택할 것

인지, 혹은 20세기 유럽과는 다른 고유한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식과 선택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

본서는 매우 방대한 영역에 걸친 논의를 담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소한 오류들도 눈에 띈다. 본서가 근현대 동아시아지역 질서의 퍼즐을 맞춰가려고 하는 만큼 다양한 학제적인 작업으로 논의가 번져가고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8년 7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26일

